

“도, 국가예산 증가율 전국평균의 10%”

정운천 의원 “4년간 전북 예산 점유율 매년 하락... 정부 예산편성과정서 구체적 근거 없어”

전북도의 국가예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1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 을)은 지난 28일 “2015년과 2016년 사이 전북도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0.7%에 그치고 있어 전국 평균이 6.5%(인 점을 감안할 때 전북도의 증가율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는 다른 지자체가 100원의 예산이 증가했다고 가정했을 때 전북도는 겨우 10원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2017년 예산(안)을 포함해 최근 4년간 전체 국가예산 대비 전북도 예산 점유율도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4년 정부 예산 335조8,000억원 대비 전북도 예산은 6조1,131억원으로 1.8%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1.6%, 2016년 1.5%로

하락하다가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가예산 400조7,000억원 가운데 전북도는 5조8,577억원으로 줄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도 전북의 경우 8개 광역도 가운데 5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가예산 증가율 0.7%, 지특회계 보조금 8개 광역도 중 5위, 예산 점유율 하락 등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정부

의 예산편성과정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은 앞서 예결특위에 출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전북의 전략사업으로 탄소산업을 선정했고 ‘대한민국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의 하나에 포함된 만큼 기획재정부는 국가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소산업의 성장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랑 협의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시에 끝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민형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부끄러움은 왜 우리들의 몫인가요?”

전북대 총학생회 시국선언

“대선 후보 연설문 시작으로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도 개입 헌법 제1조 2항 근간 흔들려”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전북대학교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통해 민주주의의 퇴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북대학교 제48대 총학생회는 지난 28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오늘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가”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총회는 “2016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리는 비선실세의 존재가 국민 앞에 폭로됐다”며 “대선 후보 연설문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도 외교와 안보, 인사 등 최순실의 개입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며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개인의 소유로 이용됐다는 사실은 우리 대학생들로 하여금 국민과 헌법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한탄했다.

총회는 “우리 대학생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최순실과 현 정권은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재벌에게 수백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심지어 최순실의 딸은 입시특혜는 물론이고 영터리 레포트에도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또 “우리는 단지 건강한 노력의 대가를



지난 28일 오후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 추모비 앞에서 열린 전북대학교 총학생회 시국선언에 참가한 학생들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바라봄에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절망과 배신감을 안겨왔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학자금대출을 갚기 위해 밤 출퇴근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점과 진로를 위해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줄 수 있단 말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대 해재무 총학생회장은 “전북대학교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국가문란,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를 때까지 행동할 것”이라며 “최순실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정동영 “박 대통령, 양심고백해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전주 병)은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탄핵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국민의 판단과 결정,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하며 “지금 청와대 권위와 권능은 무너졌고 정치권은 각자의 정치적 공화과 계산에 바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정 의원은 “박 대통령의 최순실의 도리는 양심고백”이라며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최 씨는 어떻게 박 대통령에게 국정 각 사안에 대해 영향을 미쳐왔던 것인지에 대해 가감없이 고백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사과나 최 씨의 인터뷰를 믿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최고 공직자로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고백하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의 제대로 된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

더민주 ‘비선 최순실’ 특검 논의 중단

“새누리, 상설 특검으로 정국 물타기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에 대한 특검 논의를 전격 중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상설 특검을 주장하며 특검 협상을 장기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정국 물타기를 시도한다는 판단이다. 이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분간은 특검 협상을 중단하고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겠다”라고 선언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이 사건의 진원지인데 특검을 상설특검으로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셀프 특검이라는 게 웃기지 않나”라며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 특검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발언, 새누리당이 진상규명 의지 없이 특검을 수용하는 시늉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의 문제의식은 이 사람들(정부여당·청와대 참모진)이 변명을 하고, 안 물러나고, 특검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물타기를 위해 상설특검을 내세워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이미 특검에 걸리는 사일 등을 거론하며 ‘선(先)수사, 후(後)특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특검을 하면 불통은 수사 못하고 것털만 구수될 것이다.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국민들에게는 잊혀질 것이고 정국은 전환될 것”이라고 새누리당의 국면전환 시도를 줄곧 경계해 왔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우리가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랑 상설특검이니 개별특검이니 싸우다 보면 언제 특검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다가 초점이 최순실한테만 가고 박 대통령의 잘못은 묻히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새누리당이 외형적으로는 특검을 전격 수용한 것처럼 했다가 실제 협상에서 야당의 별도특검 주장에도 상설특검을 고집하며 시작하면서 민주당으로선 이같은 국민의당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나 “다른 당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고 들끓는 민심을 반영해 우리가 세계 나가자, 저쪽에 선(先)사과와 청와대 개편을 요구하고 협상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스

박 대통령 지지율 17%로 하락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7%로 주저앉았다. 지난 2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전국 유권자 1,033명을 대상으로 지난 25~27일 사흘간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8%p 폭락한 17%로 20%대 지지율 미저 붕괴됐다.

특히 박 대통령의 마지막 보루였던 대구-경북(TK)마저 박 대통령에 등을 돌렸다. TK 지지율은 전주 대비 8%p 빠진 27%로 30%대가 무너졌다. 여당 텃밭인 부산-울산-경남 지지율도 20%로 내려앉았다. 전지역 할 것 없이 폭락에 폭락을 이어가는 셈이다. 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74%로 취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이 무려 77%나 됐다는 사실이다.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자는 7%로 조사 돼 충격을 안겨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c.go.kr)를 참고하면 된다. /뉴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축! 전주매일 창간 8주년

부안으로
마실 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